

3조3천억 규모 전남 20개 핵심 도로 건설 속도 낸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토교통부안에 반영 일괄예타·기재부 협의…내년 상반기 국가계획 확정

3조3천억원 규모의 전남지역 20개 핵심 도로 사업이 도로 분야 국가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6-2030년) 국토교통부(안)에 반영돼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시·도별 수요조사, 대상지 사전검토,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다. 이는 전남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흥-봉래 확장(31.7km·5천142억원) ▲여수 돌산 신북-우두 확장(14.6km·4천832억원) ▲장흥

대덕 신리-순지 확장(24.8km·4천274억원)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신설(7.8km·4천99억원) ▲강진 마량-군동 확장(20.4km·2천119억원) ▲화순 도암-춘양 신설(2.8km·1천509억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4.6km·977억원) ▲무안 환경 송정-마산 확장(7.6km·70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이 확정·고시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만,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개별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타당



전통시장 찾은 김지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점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국가계획 확정 이전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일괄예타를 통과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된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전남 곳곳에 있는 간선도로망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는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잇는 사업으로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이후 첫 단추를 꿴는 것이어서 섬 주민 교통기반

권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돌산 신북-우두 4차로 확장, 순천 해룡국도대체우회도로, 무안 환경 송정-마산 4차로 확장 등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당초 48개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사업이 반영됐다. 미 반영된 사업은 사업 재기획 및 논리 보강을 통해 7차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1-2025년)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등 10개 사업, 1조8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미래 100년을 이룰 핵심 사업으로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올해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주요 SOC 사업의 중장기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현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

‘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미달 공식 법정의견은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현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

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방통위법 1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립적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피청구인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면합뉴스

“오염시설 관리 권한 지방 이양해야”

김태균 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의장에 건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환경영양 시설 통합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설비 교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관리 권한을 이

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현안을 우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며 “의회 전문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정기자

유망 반도체 설계기업들 광주·행·253-254번째 업무협약

광주시가 고성능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설계기업 3곳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초 2곳을 추가 유치하면서 ‘인공지는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반도체 설계 분야 유망 기업인 ㈜모빌린트, 수퍼게이트㈜와 253-254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팹리스기업으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에이직랜드(2024년 9월), ㈜에임퓨처(2024년 10월), ㈜모아이(2024년 11월)에 이어 4-5번째 유치기업이다. 협약을 체결한 두 기업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 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광주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변은진기자

광주시, 민생경제 회복 9천800억 투입

소비촉진·기회 확대·부담 경감 사업 추진 위기 극복

‘광주 방문의 해’ 운영 통해 관광객 1천800만명 유치

광주시에 올해 총사업비 9천800억원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신규 12개, 확대 38개, 지속 47개 등 총 97개 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을 강화하고 시민생활 부담을 줄여 지역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소비 촉진’, ‘부담 경감’, ‘기회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삼아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한다.

우선 광주 방문의 해 운영, 착한소비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광주 공공배달업 확대 운영,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1천800만명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신속 집행 대상 6조8천253억원의 63%에 해당하는 4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 소비를 촉진해 경기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비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2월 까지 연장한다.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광주G-패스, 출생가정 축하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육이용원 패키지 지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이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다. 6천800개 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관광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원을 관광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전환 등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고 보고 미래 유망 산업인 육식,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농수축산물 꾸러미

전남도, 신선한 지역 특산물 구성 8천세대 지원

전남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8천여세대에 농수축산물 꾸러미(사진)를 지원한다.

꾸러미 지원사업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함께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품은 각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번 지원은 연말연시 각종 사건·사고로 어려운 도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농수축산물 꾸러미가 취약계층 가정에 따뜻한 명절 선물 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30만원 지급

전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 오늘부터 지원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24일부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1만1천27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35억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어려운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1천38명,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2천27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천908명,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723명, 법

인택시 운수종사자 2천401명이다. 전남도는 지원금이 설 명절 전 지급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3일부터 13일 까지 시·군에서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22일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서영배 교통행정과장은 “승객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운수종사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 선제 발행

도, 3월까지 할인율 10%…소비 촉진·매출 증대 기대

전남도가 이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원을 선제 발행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2025년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할인을 축소가 불가피했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를 3월까지 한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순천, 나주 등 9개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20% 확대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총 9천185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발행한 3천500억원이 소진되면 22개 시·군에서 추가로 5천185억원(6-10% 할인)을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상품권 예산이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